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초록

■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하고, 판결문 조사, 언론보도사례 검토, 피해사례와 현황파악, 피해실태조사 및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양상과 유형을 제시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과 관련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1. 연구 배경

- ①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의 증대는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한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피해 발생이 심각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온라인 이용을 기피하게 만들며, 나아가 인간관계를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점 파악과 함께 대응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② 온라인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과 두려움은 피해자 지원 기관에 신고된 일부 사례나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온라인 성폭력 제반의 피해율이나 발생 경로, 피해 유형, 피해자 인식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임. 기존의 연구들은 표본수가 너무 적거나 조사 문항이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
- ③ 법·정책적 관점에서 법적인 규정은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범죄유형을 규율하고 있으나,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자신들도 피해라고 여기지 않거나 상담소 등이 오프라인의 성폭력상담만을 예정하고 있어 상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이것을 삭제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분석 결과

- ①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관련 법·정책 현황
 - ▶ 온라인 성폭력 개념
 -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온라인은 우리와 친숙하고 일상적인 환경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정확하게 찾아 내고 그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이 증진되고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 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삭제지원 및 성폭력 행위자 구상권 행사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 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지원되고 있음.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

- 2017.9.26. 교육부를 비롯한 13개의 정부 부처(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인사처, 방통위, 관세청, 경찰청, 방심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 및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온라인 성폭력 피해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으로 검색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360건을 대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가해자, 피해자, 유포범행 및 처벌형량을 분석하였고, 2011년~2016년 4월까지의 통계와 비교분석하였음.

- 지하철 등에서의 불법촬영은 줄고, 집 등에서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 (소위 ‘리벤지포르노’)의 유포가 늘어났으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포한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음.

<표 1> 유포 여부

(단위 : 반도, %)

	[2011년~2016년 4월]		[2017년]	
유포	반도	백분율	반도	백분율
없음	1,467	95.8%	322	90%
있음	64	4.2%	34	10%
합계	1,531	100.0%	356	100%

- 1심 선고형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비율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5.3%→11.1%)하였고, 벌금형은 감소(72.0%→54.1%)하였음. 징역형량은 이전 기간과 유사하게 6월에서 1년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음. 벌금형은 이전 기간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1%였고 2017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53.5%, 30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벌금형이 47%에 이르러 이전 기간에 비해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표 2> 형벌 종류

(단위 : 반도, %)

1심 형벌종류	[2011년~2016년4월]		[2017년]	
	반도	백분율	반도	백분율
징역	82	5.3%	41	11.1%
벌금	1,109	72.0%	200	54.1%
집행유예	226	14.7%	103	27.8%
선고유예	115	7.5%	22	6.0%
전부무죄	9	0.6%	4	1.1%
합계	1,541	100.0%	370	100.0%



피해유형별 언론보도사례 분석

- ▶ 검색어 ‘음란물’을 넣어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뉴스 등 2018년 1년간 언론 기사를 검색하였음.
- ▶ 언론 보도 사례를 통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면,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영상 등을 전송하는 피해유형, ② 상대방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 협박을 빌미로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 피해유형,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집기술이 발달하면서, 음란한 영상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후 조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이러한 편집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의 피해유형, ④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신체사진을 전송받는 피해유형, ⑤ 피해촬영물이 인터넷 음란사이트,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되는 피해유형 등이 있음.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 ▶ 온라인 설문조사
 -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전국의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 경험(매체, 가해자, 방법 등 피해 유형), 후유증(자타해 위험성 등), 인식(온라인 성범죄의 범위, 대처 및 지원 방안),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음.
 - 전체 2,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없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만 경험한 피해자는 1,648명(82.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352명(17.6%)이었음.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촬영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324명(16.2%), 유포협박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96명(4.8%), 유포·재유포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57명(2.9%),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106명(5.3%)으로

나타남(중복피해 포함).

- 그 중 촬영피해의 발생 경로와 피해유형을 보면, ‘나도 모르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나의 신체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경우가 110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나의 사진, 영상물을 내 의사에 반하여 상대가 보유’하는 경우 101명(31.2%), ‘나도 모르게 내가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경우 84명(25.9%),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 일부/나체가 강제로 촬영’된 경우 29명(9%) 순이었음.

<표 3> 촬영 성폭력의 발생 경로와 피해 유형

(단위: 명, %)

구 분	합의하에 촬영	가해자가 나 몰래 촬영	제 3자가 몰래 촬영	강요·협박하여 촬영	전 체
나도 모르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나의 신체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	0(0.0)	64(58.2)	46(41.8)	0(0.0)	110(100.0)
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 일부·나체가 강제로 촬영	0(0.0)	0(0.0)	0(0.0)	29(100.0)	29(100.0)
나도 모르게 내가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장면이 촬영	0(0.0)	41(48.8)	43(51.2)	0(0.0)	84(100.0)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나의 사진·영상물을 내 의사에 반하여 상대가 보유	13(12.9)	49(48.5)	22(21.8)	17(16.8)	101(100.0)
전 체	13(4.0)	154(47.5)	111(34.3)	46(14.2)	324(100.0)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예방 대책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모두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4> 온라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단위: 명, %)

구 분	성적 괴롭힘	촬영	유포 협박	유포·재유포	그루밍
온라인 성폭력 대응 방안(매뉴얼) 개발·홍보	79(4.8)	15(4.6)	7(7.3)	6(10.5)	13(12.3)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	1,023(62.1)	210(64.8)	44(45.8)	30(52.6)	60(56.6)
온라인 게시물, 댓글에 실명제 적용하기	246(14.9)	40(12.3)	16(16.7)	11(19.3)	14(13.2)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 기구 마련	36(2.2)	11(3.4)	7(7.3)	5(8.8)	2(1.9)
온라인 성폭력 감시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222(13.5)	42(13.0)	19(19.8)	4(7.0)	16(15.1)
인권 및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	42(2.5)	6(1.9)	3(3.1)	1(1.8)	1(0.9)
합 계	1,648(100.0)	324(100.0)	96(100.0)	57(100.0)	106(100.0)

▶ 심층면접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은 무제한의 복제가능성으로 인하여 1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해가 지속되며,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피해의 사소화, 피해자 비난으로 인하여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부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음.
- 유포 이전에 유포 협박 단계에서는 오직 유포를 막는 데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유포된 이후에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대응을 하게 되며, 신고나 지원 요청은 곧 촬영물 유포 피해를 확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개인정보를 남기고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사비를 들여 민간 기업에 의뢰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촬영물이 민간 기업에 집적되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가 된 사례가 있음.
- 온라인 성폭력, 특히 촬영물 유포의 피해자는 일상이 파괴되고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함.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 법·정책사례

- ▶ 미국의 경우 성범죄 문제로의 접근보다는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과 정책이 마련되었음.
- ▶ 영국은 성범죄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음. 영국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홈페이지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위스퍼 컨택이 가능한 것임. 자신을 알리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 호주의 경우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피해자중심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님. 가해자의 행위중심으로 규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 일본은 한국에 비해 처벌규정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이 사생활의 침해 보호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일본법제는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3. 정책 제언



지금까지 살펴 본 온라인 성폭력 피해양상과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근거로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온라인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경찰신고 관련 대응방안 제고	온라인 성폭력피해자 지원방안 실효성 제고	온라인 성적 괴롭힘 규제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촬영, 촬영물 편집·합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 필요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관련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필요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적극적 수사 확대 • 경찰서 내 피해자 진술공간 및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유포 전 단계에서의 신고 두로움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지원 • 삭제와 그 외 지원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한 내용의 문구 전송 등의 처벌가능성 인식 유도 •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방안 마련 • 수사기관의 적극적 단속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온라인 성폭력 대상 입증한 신고형 부과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청소년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화 예방 및 피해해소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대상 법정형을 고려한 신고형 부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과도한 선정적 보도 지양 • 언론보도의 2차 피해 가능성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보도지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온라인 성폭력범죄행위 예방 •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수법의 사전예방교육 실시

참고 자료

강현숙·이동훈(2017), “한국판 지속비에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9권 제4호, pp.1027-1052.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통권 제7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pp.72-117.

김현아·김숙희·김영미·장윤정·서승희(2018),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류지아·하은희·정최경희·김지은·박신원·김현주(2017), “소방공무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생물정신의학』, 제24권 제1호, pp.10-1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2018),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기획세미나, 2018.8.24.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인터넷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 연구』 제22권 제10호, pp.101-129.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 법학』 제9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pp.59-95.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